



재한
팔레스타인인
여성 인터뷰
2~3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현황
4~6면

전공의
집단 사직과
파업
7면

정착자
식민 지배의
잔혹한 역사
10~11면

정부 지원 부족으로
영망 된 늘봄학교
14~15면

재한 이집트 난민이
말하는 난민 처지
16면



〈노동자 연대〉신문 지지자들
앞에 놓인 당면 전망
8~9면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은

특별히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생각하자

관련 기사 2~3면



재한 팔레스타인인 여성 시마 인터뷰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은 억압과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강인한 존재입니다”

다섯 달째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이 지속되면서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은 혹심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매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을 이어 오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팔레스타인 여성들과 연대하는 집회·행진을 개최한다. 이 운동에는 재한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인 시마(사진)를 만났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마이고요. 이화여대에서 아시아 여성학 연구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안 지구의 라말라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잠시 다른 지역에서 살 때도 있었지만 주로 라말라에서 23년을 살았어요.

다섯 달째 이어진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로 수많은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이 극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의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학살이 벌어지는 상황은 단지 페미니즘이나 여성의 이슈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죠. 그럼에도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특별한 면이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성들이 생리대 같이 필수적인 여성 용품을 전혀 구할 수 없어요. 천 조각 등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쓰고 있어요.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적 지원이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여성들은 자신이 돌보는 사람으로서 실패하고 있다고 느껴요. 아이들한테 줄 음식이 없고, 출산 후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돌봄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좌절감이 더욱 커요.

가자지구에서 학살이 시작된 이후 포로로 잡혀간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이스라엘군의 저격수들이 갑자기 길거리에 있는 여성을 쏘서 그 자리에서 피 흘리며 죽는 영상을 봤어요. 이런 상황은 모든 팔레스타인인들



서울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한 시마

이 겪는 인도주의적 비극이지만 그 안에서 여성들이 겪는 특별한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번 가자 학살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점령 속에서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 왔나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하기 전부터 상황이 안 좋았어요. 서안지구는 곳곳에 이스라엘군 초소가 있고 군인들이 다녔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총으로 가격하는 일은 다반사예요. 히잡만 쓰고 있으면 히잡을 당기고 괴롭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전혀 없어요.

이번 가자 학살 이전에 이미 감옥에 포로로 갇혀 있는 여성 수감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감옥에

가둬요. 증거도 없고요. 단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혐의만으로 잡아가요. 수감된 여성들은 생리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임신부들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요. 알몸 수색을 기본으로 하고 강간도 벌어져요.

얼마 전에 포로 교환이 있었잖아요? 이때 풀려난 한 팔레스타인인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도 몇 년 전에 감옥에 끌려갔는데 단지 뭔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혐의였어요. 아이도 있는 평범한 여성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이 여성은 차 사고로 체포 당시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 감옥에서 8년 동안 치료도 못 받은 채 방치됐어요. 그러다가 이번 포로 교환으로 다행히 풀려 나와 요르단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지난 학기에 제가 한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정책에 따라 팔레스타인인들은 차등적으로 시민권이 나와요. 팔레스타인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인 여성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인 남성과 결혼하면, 통행권이 제한돼 여성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하죠.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도 못 만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스라엘의 정책이 팔레스타인 가족을 망가뜨리고,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일상을 영위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한다는 것이 제 연구의 요지예요. 물론 아무리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졌더라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열등한 대우를 받아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에서는 인종차별주의가 항상 그 중심을 관통하고 있어요.

저는 4년 동안 칼란디아라는 난민 캠프에 살았어요. 그 바로 옆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검문소가 있어서 교통이 엄청 복잡하고 붐비고 공기 오염도 심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불을 피우고 있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매일같이 최루탄과 총을 쏘 대요. 한밤 중에도 창문을 다 내리고 양파를 코에다 대고 살아야 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비르제이트 대학을 나왔는데요. 아주 좋은 명문 대학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쏘면서 학생들을 잡아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교차성’ 개념을 아시나요?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은 다른 모든 여성처럼 가부장제하에서도 차별받지만, 이스라엘 점령이나 백인 우월주의 등 여러 다른 방향에서 오는 억압을 받아요.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서방 지도자들은 자신이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의 수호자인 양 행세하며 이스라엘의 추악한 점령과 학살을 가리려고도 하는데요.

이런 일은 오래됐고 놀랍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학살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수법이지요.

비단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서방 지도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이고 인류의 모범이 되는 양, 인권에 대해 민감하고 고귀한 정신을 가진 양, 그리고 남들은 자신보다 더 열등한 양 행세해 왔어요.

여기에는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주의가 있어요. 저들은 마치 이슬람 국가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은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해 왔다

들은 테러를 저지르고, 인권이 없고, 여성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하죠.

서방 지도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자신의 문화나 사상 등을 주입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전통, 사상을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예를 들 수 있겠어요. 탈레반이 좋은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구해 주겠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미국이 진짜 관심이 있는 건 여성의 권리가 아니에요. 사실 가부장제라는 말 자체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나왔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여성의 히잡을 무조건 벗기려고 해요. 이것은 무슬림 여성들의 기본적인 선택권과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 원래 히잡을 썼었고 히잡을 쓰지 않는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를 두고 이슬람 종교 자체가 문제라거나 모든 무슬림 여성이 억압받고 강제로 히잡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히잡을 쓰고 싶어 해요. 저는 쓰고 싶지 않고요. 이것은 어머니와 저의 선택이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해요.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이 억압받는다면, 그건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싸우고 투쟁해서 바뀌 나가야죠. 그건 다른 누군가 해 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인들은 고통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점령과 학살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해 왔는데요. 팔레스타인인 여성들

의 저항에 대해 알려 주세요.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은 여러 시위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러 일을 조직하거나 봉사하는 일을 해 왔어요. 인티파다가 일어나던 때에는 직접 나가서 남성들과 함께 돌을 던지고 싸우고 전쟁에도 참가했어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여성들은 많은 재능을 발휘했어요. 글, 영화, 그림 등에서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이 저항을 예술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최근에 한 팔레스타인 여성 언론인이 죽었는데, 그녀는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전하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한 여성 의사는 병원 앞에서 총에 맞고 쓰러져 있는 환자를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서기도 했죠.

지금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항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우리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은 억압과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이후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부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매주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고, 여기에 당신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여성들과 내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 개인으로서 말하자면 지금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떤 점에서 저는 특권을 누린다고도 느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의 고통을 직접 겪지 않으니깐요. 하지만 저의 일부는 언제나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나의

고향이고 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는 복잡하고 미묘한 심정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제가 거기에 일부가 됐다는 것이 정말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됐어요.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인도주의적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런 학살

이 있었다라도 저는 제일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주의를 환기하고 행동에 나섰을 거예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든 간에 인간이 이런 학살을 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이것은 부정의예요.

지금 다섯 달 동안 학살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 바로 저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과 합쳐서 학살을 멈추라고 하는 행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행동함으로써 평화, 정의, 평등이 중시되는 세상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어렵고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지금으로서는 모두 전진이고 진보예요. <노동자 연대> 독자 여러분이 주신 모든 지지와 연대에 깊이 감사해요.

3월 8일(금) 세계 여성의 날,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을 지지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인터뷰·정리 성지현·이예송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집회·행진

팔레스타인 여성들과 연대를!

3월 8일(금)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광화문역 4번 출구 인근, 서울 종로구 종로1가1-3)

※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 집회 후도심 행진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문의 010-7550-2131
people.freepalestine@gmail.com
웹페이지 bit.ly/people-freepalestine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홍보 등에 사용됩니다.

25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3월 9일(토) 오후 2시



재한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의 호소 영상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지지하는 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구호 식량 받으려던 가자 주민 대학살

구호품 받다 압사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짓말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밀가루 학살”은 이스라엘 국가가 테러를 자행하고 은폐한 전형적 사례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다른 학살들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짓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나고 있다.

3월 2일 토요일 현재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최소 155명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시신을 계속 수습하는 와중에 집계된 것이니 최종 수치는 더 늘 수 있다.

이스라엘군은 700명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스라엘군은 2월 29일 목요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있는 나불시 교차로에서 구호 식량을 기다리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발포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입장을 고쳐 가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 그리고 미국·영국과 주류 언론들이 이를 비호했다.

2월 29일 목요일 새벽, 식량이 절박한 팔레스타인인 수백 명이 가자시티 하룬 알라시드가(街)로 모여들었다. 밀가루를 실은 구호 트럭의 진입이 허용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내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해당 지역으로 구호 물자를 반입하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구호 트럭에서 밀가루 포대를 내리려 할 때,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발포했다. 거리가 피로 물들었다.

학살 생존자들은 이스라엘군이 총과 탱크로 사람들을 쏘고 탱크로 깔아 뭉갬다고 전했다. 한 생존자는 알자지라에 이렇게 전했다. “구호 물자를 좀 얻으려고 여기 왔어요. 저는 어제 정오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네 시 반쯤, 트럭이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인들이 우리에게 마구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마치 매복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호 트럭에 다가가자, 이스라엘군 탱크와 전투기가 우리에게 발포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생존자 마무드 이브라힘 압델 살렘 오바이드는 이렇게 전했다.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구호품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본 바로는, 알라시드가(街)에 주둔해 있던 탱크 쪽으로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굶주린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155명 사망했다

“저는 첫 번째 트럭에서 구호품을 꺼냈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갈 때 저는 탱크에서 쏜 총탄 두 발을 맞았어요. 한 발은 등에, 다른 한 발은 손에 맞았죠.”

또 다른 생존자 아티야 압델 파타는 이렇게 전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트럭이 진입하자 사람들은 트럭에 다가가 구호품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뒤 세 번째와 네 번째 트럭이 들어오자 점령군이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학살 생존자 증언

“저는 구호품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러다 등에 총을 한 발 맞았어요. 그때 저는 이스라엘군 탱크에서 700미터쯤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국가는 사망자 대부분이 구호품에 몰려들었다가 압사한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을 탓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렇게 주장했다. “오늘 이른 아침 가자지구 북부에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이 진입하던 중 가자지구 주민들이 트럭을 포위하고 트럭에 실린 구

호품을 약탈했다.

“그 과정에서 가자지구 주민 수십 명이 밀리고 밟혀 부상을 입었다.”

이는 금세 거짓말로 드러났다. 사상자 대부분을 수습한 알아와다 병원의 원장 서리 모하메드 살하 박사는 환자 대부분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살하 박사는 알아와다 병원으로 후송된 부상자 176명 중 142명이 총상을 입었고 34명이 군중 압착 때문인 듯한 부상을 입었다고 AP 통신에 전했다.

카멜 아드완 병원의 원장 후삼 아부 사피야 씨는 사상자 대다수가 머리·목·가슴에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학살 장면을 담은 영상이 SNS에 쏟아져 나오자, 이스라엘군은 발포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피터 러너는 영국 방송 채널4 뉴스에 나와 이렇게 주장했다. “폭도들이 후송 차량에 몰려들었고,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저지했다.

“후송대를 호위하던 탱크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밟히는 것을 목격했고, 폭도들을 해산시키려고 신중하게 몇 차례 경고 사격을 했다.”

발포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시인한 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특별 보좌관 마크 레게브는 이스라엘군이 학살에 일절 연루되지 않았다고 시사했다. “구호 트럭이 인파에 둘러싸인 사건 당시 총격이 있긴 했지만, 총을 쏜 것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었다.

“발포한 것이 하마스인지 다른 집단 인지는 모른다.”

레게브는 이스라엘이 학살에 연루돼 있지 않고 심지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이 학살의 야만성을 부인하고 싶어한다. 2월 29일 목요일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대표들은 이 학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 발표를 가로막았다.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 리야드 만수르는 유엔 안보리에서 오직 미국만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 로버트 우드는 “현장 상황에 대한 모든 사실 관계를 듣지 못한 문제” 때문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을 규탄하거나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다섯 번째로 가로막았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사무소는 “절실하게 필요한 구호품을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발포한 사건이 최소 14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들은 1월 중순에서 2월 말 사이에 살라호 알딘가(街) 쿠웨이트 교차로와 나불시 교차로에서 벌어졌다.

유엔은 “이 사건들 대부분이” 사상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택한 전쟁 수행 수단·방법들은 인도적 재앙을 낳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는 또다시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제국주의자들은 학살 은폐를 돕고자 한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Israel's lies over the 'flour massacre' unravel' (2024. 3. 02) / 번역 김준호



사진 출처: 이시안지구의 목소리

이번 보고서는 이스라엘 비난 여론 몰이기 용이다. 이스라엘에 방문한 유엔 특사 프라밀라 패튼

유엔 조사팀의 하마스 성범죄 주장 이스라엘 국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른 것일 뿐

3월 4일 유엔 특사인 프라밀라 패튼이 이끄는 조사팀이 보고서를 내어, 지난해 10월 7일 공격 당시 하마스가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성폭행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측이 자행한 성범죄 혐의 보고가 일부 포함됐으나, 압도적인 강조점은 하마스의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특사 팀의 보고서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에 조사 과정에 문제들이 있다.

조사팀은 애초 이스라엘 정부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에 방문했고, 모든 활동은 “이스라엘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 조사팀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과 33차례의 미팅을 가졌다. 그리고 노바 음악 축제 현장 등 현장 방문도 모두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조사팀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을 “한 명도” 직접 만나지 못했고, 하마스의 성범죄를 입증할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음도 인정한다.

그래서 조사팀의 보고서를 보면,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대부분 이스라엘 국가기관들이 제공했다.” 그래서 그런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팀은 음악 축

제 현장 등 적어도 3곳에서 집단 성범죄가 벌어졌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건 상황 등 간접적 근거들은 제시돼 있으나 여전히 스모킹 건, 즉 결정적 증거는 없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유엔 보고서도 본질적으로 거기서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하마스는 자신들에게 제기된 집단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가자지구 내 인종 학살을 부추기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가 공개되기에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은 더 거세지고 있었다. 라파흐에서 벌어지는 학살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군이 구호 차량을 기다리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발포해 적어도 870여 명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지난달에 나왔다.

이런 일들 직후에 공개된 유엔 특사의 보고서는 ‘10월 7일 공격’의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대한 비난 여론을 흐리는 데에만 이용될 것이다.

김영익

라파흐 현지의 목소리

“여기는 완전히 혼돈 그 자체입니다”

소피 스콰이어

가자지구 남부 라파흐에 100만 명이상이 내몰려 있다. 이들은 언제 이스라엘의 전면 공격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빛삼 씨는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엘발라에 살았지만 최근 라파흐로 도망쳐 왔다. 그녀는 이렇게 전했다. “모든 것이 완전 통제불능 상태가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협상이 실패하면서 모두들 절박해졌고 휴전이 이뤄질 희망은 없어 보여요. 제 아이들은 계속해서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묻고 있어요.”

“아이들은 따뜻한 식사와 따뜻한 이불을 꿈꾸고, 이전처럼 살고 싶어해요. 아이들은 지금의 이 악몽 같은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3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 이스라엘이 국제 원조를 차단하고 병원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세하브 통신사는 গত 2개월 된 마흐무드 파두흐가 지난 일요일(25일)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보도했다.

그 아기를 돌보던 구조 대원은 이렇게 전했다.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서 도와 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기는 창백했고 마지막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아기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아기는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아기를 중환자실로 데려갔습니다. 아기는 며칠 동안 이유식을 먹지 못했는데 가자지구 전체에서 이유식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아기 무함마드 자예흐도 음식을 먹지 못해 죽었다고 한다. 가자지구 북부의 카말에드완 병원의 소아과장인 후삼 아부 사피아는 가자지구 전역에 “만연한 영양실조”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안지구의 목소리

“여기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밤낮 가리지 않고 습격합니다.” 서안지구의 도시 살피트 인근에 사는 팔레스타인인 압둘라 씨가 지난 일요일 <소셜리스트 워커>에 전한 말이다.

“드론들이 공중에서 폭격합니다. 지난주에도 드론이 차량 한 대를 폭격해 적어도 2명이 죽었고 더 많은 이들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검문소를 늘리고 도로를 봉쇄했어요. 병사들도 주둔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착자들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 가족의 한 지인은 자기 땅에서 올리브를 따고 계셨습니다. 한 무리의 정착자들이 그분에게 다가가 총을 들이밀었어요. 그 정착자들은 ‘우리 땅에서 꺼져’라고 말했고 그분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총으로 쏘버렸습니다.”

“저들은 가자지구에서 학살을 시작했고 이제는 서안지구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합니다.”

압둘라는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지만 자신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 서안지구에서 우리는 단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정착자들의 공격 소식이나 도로 상황을 서로 전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어요.”

압둘라는 외교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은 이미 오랫동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등 이스라엘 지원 세력들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의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항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규모 운동이 없다면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출처 Sophie Squire, “Things are completely out of control here—voice from Rafah” (2024. 2. 27) / 번역 김중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5개월

이스라엘은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써 5개월이 됐다.

이 전쟁의 성격은 일찍부터 명약관화했다. 민간인 공격 등 하마스의 “테러”에 맞서 “정당방위”를 하고 있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은 완전히 파산했다.

이스라엘은 자국에 맞서는 저항은 무엇이든 “테러”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폭격, 처형, 도시 봉쇄, 군 병력 투입, 검문소를 설치해 이동 제한하기, 토지 강탈, 팔레스타인인 가옥을 부수고 그 자리에 시온주의자 정착촌 건설하기, 팔레스타인인에게 모욕감 주기 등에 저항하는 투쟁은 결코 “테러”가 아니다.

10월 7일 공격은 이스라엘의 억압에 맞선 정당한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투쟁의 일환이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은 “정당방위” 이기는커녕 잔인한 국가 테러의 전형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은 난민촌·병원·학교 등 가자지구의 건물들을 남김없이 파괴하고, 여성·어린이를 비롯해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2월 29일(현지 시각) 현재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3만 35명이고 부상자는 7만 457명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을 굴복시키지도, 하마스를 제거하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UN에서조차 고립돼 오로지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외교적·군사적 면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난점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전에만 해도 중동은 미국의 세계 영향력 유지 전략에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여 왔고,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경제적·지정

학적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생겨날 중동에서의 군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은 이스라엘과 아랍 정권들 간의 관계 ‘정상화’(소위 ‘아브라함 협정’)를 원했다. 특히 걸프 연안의 ‘형님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정이 중요했다.

지난해 9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협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다. ...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역사적 거래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이런 구상은 나날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분쇄하지 못한 채 가자지구에서 학살을 지속하자,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와 이라크를 폭격하고, 홍해에서 예멘 후티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서방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국적 군대를 구성해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벌이고 있다.

광란의 도가니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2023년 12월 22일 자).

“10월 7일 공격은 바이든이 그 지역에 군사적·전략적으로 집중하도록 잡아당겼다.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미국이 떠났다고 바이든이 생각했던 그곳에 말이다. 예멘 후티 반군이 많은 서방 기업이 지나는 홍해를 막아 해상 공급망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이것은 백악관의 뇌리를 사로잡고 있는 충돌에 상업적 면을 더한 것이다.”

상황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행보는 더욱 잔인해질 위험성이 있다.

지난주 목요일(2월 29일) 새벽 이스



아파르트헤이트 국가 이스라엘에 맞선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라엘군이 구호 식량을 받으려던 가자 주민 870여 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만든 것은 최근의 사례다.

또, 이스라엘 정부는 이르면 3월 10일 라파흐 지상전을 벌이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점 하나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와 정착자들이 서안지구에서도 자그마치 40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는 사실이다! 공식적인 전쟁 상태도 아니고 하마스가 통제하지 않는 곳에서 말이다.

극우가 핵심에 포진해 있는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서안지구에 더 많은 정착자들을 보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도 확대하고 있다.

2월 26일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거점이라며 바알벡을 공습했다. 바알벡은 수도 베이루트에서 동북쪽으로 70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시작 이후 레바논 영토 가장 깊은 곳을 겨냥한 것이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이스라엘이 늦봄쯤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네타냐후는 2006년 헤즈볼라에 당한 패배를 설욕하고 싶어 한다. 또, 이스라엘 북부에서 시온주의자 공동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내부의 불만을 달래야 하는 처지다.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북부(대부분 갈릴리)에서 자택을 떠나 대피한 이스라엘인이 12만 명이다.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 타결 가능성이 언론에서 흘러나오지만 이스라엘은

살인적 광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소수의 정직한 역사가와 기자 등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인 다수는 팔레스타인 점령과 공격을 지지한다. 평화는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의 어젠다에 없다.

유럽연합의 위선적인 호소와 미국 정부의 교활한 논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부 각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파괴와 학살을 자랑한다.

병사들은 불타는 주택 사진을 찍어 X(옛 트위터)에 올리며 전과를 축하한다.

2월 25일 이스라엘의 한 병사는 가자시티 인근 자이툰의 한 가옥이 불타는 장면을 폰 카메라로 찍은 뒤 “작은 바비큐가 아주 재미있다”고 틱톡에 올렸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태생부터 정착민 테러 국가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착자 식민 국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중동에서 미국 등 서방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지키고 그 지역 대중의 혁명적 분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스라엘 국가 기구를 철저히 해체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이스라엘의 정치 시스템, 사법제도, 군대, 정착자는 모두 팔레스타인인들에게서 땅을 빼앗고 추방하는 것이 자기들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본다. 모든 면에서 인종격리적인 아파르트헤이트 국가가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를 보여 주는 듯하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국제적 양심을 계속 표현해야 한다.

김인식

전공의 집단 사직과 파업

의대 증원 반대 요구를 지지할 수 없지만,
윤석열의 총선용 졸속 시행도 우려스럽다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하고 파업에 나선 지 3주가 지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검사 등이 지연되고, 응급실 기능이 축소돼 (뺑뺑이를 도는 등) 환자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절차를 실행하고 있다.

본지는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대가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전공의 탄압은 결코 의료 평등화를 위한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을 등에 업으면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선거적 계산을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의 칼날은 노동계급의 또 다른 투쟁과 항의 운동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좌파라면 윤석열 정부의 전공의 탄압을 편들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압박만으로 전공의들이 투쟁을 멈출 것 같지는 않다. 필수재인 그들의 노동력을 대체할 대안을 정부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공의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도 한숨과 분통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여야정·의료계 협의체를, 녹색정의당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도 윤석열의 의대 증원 계획에도 결함이 많다고 지적한다.

또,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열은 야당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보다는 못 이기는 척하며 의대 증원 규모만 축소하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할 공산이 크다.

의료 시장화와 지역간 불균등 발전

때문에, 시장 하의 의사 증원은 경쟁 격화를 우려하는 대다수 의사들의 불안감만 자극할 뿐,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대안이 못 된다.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시장을 제약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시장주의자들인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과 의료 ‘산업화’를 기조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위해 여러 달 동안 준비해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조차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의사 수를 소규모 증원하려다가 실패한 민주당은 진정한 대안(비시장적인)이 없이 그저 총선용 “협의체”나 운운하고 있다. 강대강 충돌을 중재한 해결사를 자임하는 동시에, 여당 시절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의 의대 증원 정책에도 지역의료·공공의료 강화 대책은 극도로 미미했다.

의대 증원은 필요한 일이지만 제대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장 논리를 제거하거나 제약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제시해야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을 수 없다.

전공의들이 보기에 의대 증원을 막으면 당장에 소득 수준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시장 논리에 순응하며 자신의 미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것은 환자나 동료 노동자 등 노동계급의 다른 부분에 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 되면 환자와의 신뢰 관계, 의학적 필요에 입각한 진료 등 의료 윤리, 동료 노동자들과의 연대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협회 등의 주장은 거짓말일 뿐이다. 의사 수 자체보다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이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의사협회 등은 정작 불균형을 완화할 대안을 외면한 채 무조건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시장화된 의료·교육 시스템에서는 의대 증원 같은 필수 조처도 반발을 낳고 그 결과도 뒤트리게 된다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면 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수십 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봐도 전혀 진실이 아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장 체제와 지역간 불균등 발전하에서는 개별 의사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에 이용될 뿐이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청년들 중 대다수가 개인의 이익만큼이나 대중의 필요를 중시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교육과 의료를 지금처럼 시장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 공공 의료 비중이 매우 적은 한국에서 그런 변화는 커다란 사회적 격변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과거에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 등을 벌였을 때 의협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전공의들이 없지는 않았다. 다만, 임시직에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도 선배 의사들에게서 기술을 전수받아야 하는 처지 탓에 저항이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전공의 노조’도 주도자들이 진급하면서 몇 년 만에 흐지부지됐다.

의대 정원은 늘어야 한다. 그토록 필수적인 조처를 정부가 단지 선거용 책략으로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도, 노동계급의 일부인 전공의들이 그에 격렬히 반발하는 것도 모두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의 의료와 교육이 시장에 내맡겨져 온 결과다. 이 방향 자체에 도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들 앞에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이스라엘이 라파흐를 글자 그대로 초토화하고 있는 동안 미국과 영국은 예멘을 폭격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 학살하며 무력으로 중동에서 패권을 분명히 해 두려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있어서 무력사용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게다가 동유럽 전선인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에 확연히 밀리고 있다. 전쟁 개전 이래 2년간 약 5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했고, 10만 명의 러시아인이 사망했다.

일부 좌파 단체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식의 서방 프레임에 공명하며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승리를 바랐지만, 그들은 좌파를 자처하기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비록 그들이 최근 민주노총 관료 기구 안에서 꽤 세를 늘렸을지라도 그것은 민주노총 관료 다수의 보수화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레닌은 제국주의가 "전면적인 반동"이므로 제국주의간 충돌에서는 "민주공화정 지지 부르주아지와 반동 군주정 지지 부르주아지 사이의 차이가 없어진다. 둘 다 산 채로 썩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전략 분석가들은 차기 격전지가 대만해협이 될 것이냐, 한반도가 될 것이냐, 중국과 인도의 접경지역이 될 것이냐, 남아시아가 될 것이냐를 놓고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가 화염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전망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분명히 협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제국주의적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응해 한미일 3자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외교 전략을 비판하며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한미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놓고 미국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미국 측은 종전선언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안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제국주의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세력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고 지난해 8월 한



서민들께 미 해군

제국주의 충돌에서는 "민주공화정 부르주아지와 반동 군주정 부르주아지 사이의 차이가 없어진다"(레닌)는 말이 갈수록 중요한 시대이다

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명확히 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이 기존의 미국 주도 세계 질서를 다극화된 질서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정책들에 진보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반미 자주파도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신실크로드전략, 즉 일대일로라는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 실행되고 있고 기존의 글로벌 세력균형의 재편을 목표로 하는 것일 뿐이다.

스탈린주의자들은 미국 반대가 제국주의 반대의 전부인 것으로 제국주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연스럽게 진영논리와 융합된다.

바이든과 윤석열이 '자유'를 입버릇처럼 말하며, 냉전 시대에 미국이 '자유진영' 어찌고 하며 떠던 진영논리를 재생하고 있는 것의 거울 영상이다.

그러므로 반미 자주파의 입장은 나름 급진적인 사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진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헤게모니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새로운 중국·러시아·브라질·인도 등의 다극화된 자본주의 국가 연합으로 상쇄하지 못한다. 갈등과 충돌은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된다. 제국주의적 경쟁은 더 심화되고 더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 질서의 혼란으로부터 누가 득을 얻을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글로벌 차원의 계급투쟁의 향방이 결정적이다. 제1차세계대전 전야에 독일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국주의와 전쟁, 다른 나라를 강탈하는 것, 다른 나라를 놓고 흥정을 하는 것,

것, 국제법 위반, 폭력 정책 등에 맞서 싸우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와 싸우는 것에 의해, 곧 세계적인 인종학살을 사회 혁명으로 맞서는 것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요컨대, 기존의 국제적 국가 체계를 개선·개량하는 것은 공상이고 오직 그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만이 현실적이다. 오직 반제국주의 투쟁만이 유일한 선택지이다.

억압적이고 우익적인 정치에 맞서

한편, 세계 도처에서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세계의 수십 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한편, 일본과 한국도 총선을 치른다. 유럽의회와 인도, 멕시코 등지에서도 선거가 치러진다.

저발전국 일부에서는 말 그대로 "실패한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령 아이티나 일부 필리핀 지역, 일부 엘살바도르 지역 등지에서는 갱단들이 준동해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가 펼쳐지고 있다.

적잖은 주요국들에서 극우가 전진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그렇다. 미국에서는 2021년 1월 6일 극우의 국회의사당 습격 이후 겨우 3년여 만에 선거가 열리고 트럼프가 재선될지도 모른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프랑스 르펜의 국민연합과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이 3등이나 4등을 할 것



서민들께 미 해군

미국 극우의 국회 습격 겨우 3년여 만에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다

농인 당면 전망



불황기에는 상이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혁명적 좌파의 단결 정치가 중요하다

으로 예상되고 있다.

극우가 부상하는 나라들에서 극우는 (1930년대 초와 달리)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에 힘입어 부상하기보다는 지배 계급의 우경화를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식으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나라의 지배자들은 여전히 재정 긴축을 시행하고 있는 데다 새로 군비 증강,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 지원 등을 추가하고 있다. 게다가 기성 자본가 정당 자신이 이민자와 난민 억제와 억압 등 극우 정치 세력들의 강령과 정책을 갈수록 더 많이 채택하고 있다.

소위 좌파 정당이라는 곳들도 - 가령 그리스 시리자와 영국 키어 스타머의 노동당, 바젠크네히트의 독일 좌파당 - 이민자와 난민 정책들에서 똑같이 차별적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극우가 득을 보기가 쉽다. 그러나 극우의 득세가 전반적인 추세라든가 하물며 불가피한 추세인 것은 아니다. 가령 정치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부와 여당 바깥에서 주목할 만한 극우나 파시스트가 준동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지난해 정부와 여당 자신이 급속히 우익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일 것이다.

우익 본색이 드러난 결과 윤석열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중의 경고를 받고 총선 전략을 수정해 지금은 한동훈을 내세워 '젊은 합리적 보수'인 척하고 있다.

이것이 총선을 앞둔 착한 사람 코스프레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때처럼 명확하지는 않다. 민주당 집권이 바로 얼마 전이었고(한 지역의 보궐선거와 달리 총선은 전국적이다), 국회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대통령 윤석열이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 현상' 덕분에 전면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국내적으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세계 질서와 국내 정치 질서는 여전히 불안정할 것이다. 한국에서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밀어붙이는 이른바 '법치의 과잉' 또는 '정치의 사법화'도 변함 없을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채 인플레이션도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처럼 일부 나라들에서는 노조 지도층의 개혁주의적 한계가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활동가들에게는 입증되기 시작할 만큼 노동자 투쟁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노동계급 국제주의를 향하여

한국에서도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공격이 다시 두드러지면 노동자 투쟁의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단지 경제적 투쟁뿐 아니라 정치적(즉, 전면적) 계급 투쟁이 분출할 수도 있다.

노동계급의 생계비 고통과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올해에도 생계비 고

통에 맞선 저항, 윤석열의 노동개혁과 법치를 앞세운 공격에 대한 대응, 이주노동자 배척 시도에 맞선 연대 건설 등이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작업장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에도 나서야 한다.

지난해 늦여름 서이초 교사 사망 여파 속에서 일어난 교사 운동은 정치적 효과를 내면서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여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경제 불황기 노동자 투쟁의 성패는 상이한 불만과 투쟁을 서로 연결시켜 투쟁을 계급적으로 전면화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적 노조 지도자들이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통제력을 강하게 발휘하면서 부문주의(따라서 연대 훼손)와 전투성·급진성 결여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등장 이래 노조 지도자들이 비정규직 방어를 외면하면서(가령 전교조 집행부가 기간제 교사 정규교사와 외면) 노동운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반제국주의뿐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에서도 혁명적 좌파의 단결 정치(국제주의를 비롯한)가 중요하다. 다른 누구보다 본지 지지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구현하고자 애써야 한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주민 유입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이제 이주민의 구성도 이주노동자, 난민, 유학생, 결혼이주민, 이주민 2세대(청소년) 등으로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다. 이주민이 한국 노동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를 반대해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좌파가 흔해졌다. 이런 입장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지고, 이주민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는 일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살펴볼 때 본지 지지자들은 이주민·난민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난민 운동 건설이 그 출발점이다.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 운동에 이주민·난민들의 참가는 운동에 급진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본지 지지자들은 이집트인 난민 인정 운동에 연대해 상호 신뢰를 형성한 바 있고, 이것이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 운동 건설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그런데 정부가 이 운동에 참가하는 이주민·난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로부터 이주민·난민들을 방어해야 한다. 정치적 권리를 지키고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를 반대해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좌파가 흔해졌다. 이런 입장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등장 초에 본지 지지자들은 전설적인 흑인 복서이자 급진적 무슬림이었던 무함마드 알리의 유명한 말을 빌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는 활동 기조를 정했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 서이초 교사 사망 항의 교사 집회 등에 동참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를 열었고, 지금 5개월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구축하고 있다.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벌처럼 쏘기'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나비처럼 날아' 것을 잘 해야, 즉 판에 박힌 일상을 잘 끌고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가 순발력 있게 팔레스타인 연대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은 제국주의와 중동 정세, 시온주의와 유대인 혐오, 이슬람과 이슬람주의 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덕분이다.

이스라엘을 식민 정착자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그저 학술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다. 그런 규정은 이스라엘의 본성을 설명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지 전망하도록 해 준다.

저술가 일란 파페는 이렇게 지적했다. “시온주의가 정착자 식민 운동이라는 규정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팔레스타인인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영국이나 미국의 여느 식민지와는 다르며, 세계의 다른 곳에서 나타난 현상에 해당한다고, 즉 정착자 식민지라고 봤습니다.

“정착자 식민 운동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유럽 바깥에서 식민 정착자 사회를 성공적으로 수립하려면 정착지의 토착 원주민을 말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착자 식민 운동이 언제나 토착 원주민을 말살하려 한다는 지적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에서 펼쳐진 끔찍한 역사와 잘 부합한다.

그곳에서 정착자 식민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토착 원주민을 말살하다시피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새 국가”를 세웠다.

이를 두고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오스트레일리아 토착 원주민의 멸절과 노예화, 토착 원주민 광원들의 매몰, 동인도 제도의 정복과 약탈, 인신매매할 흑인을 포획하는 사냥터가 된 아프리카, 이런 광경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시대의 여명을 알렸다.”

주류적 관점의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조차 이렇게 인정한다. “국가가 승인한 학살 등 식민주의 인종 학살의 결과로, 침공 전 100만~150만 명이던 토착 원주민 인구가 1900년대 초에는 10만 명 이하로 줄었다.”

토착 원주민을 모두 살해하지 못한 경우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을 척박하고 비좁은 땅에 몰아넣어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파괴하고 그들의 언어를 없애려 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 내거나 억압자들의 우월함을 가르치는 교육 제도를 강요했다. 팔레스타인이 “땅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임자 없는 땅”이라는 시온주의자들의 주장은 제국주의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통을 답습한 것이다. 태즈메이니아[오스트레일리아 동남쪽의 섬 — 역

자], 캘리포니아, 나미비아에서 자행된 토착 원주민 인종 학살도 그 땅이 “비어 있다”거나 “임자가 없다”는 공통된 거짓말과 함께 시작됐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은 무주지(“주인 없는 땅”) 원칙을 내세우며 그런 땅은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라고 주장했다. 나미비아에서 식민주의자들은 “지도상에 깨끗하게 밀어 버린 지역을

시온주의 식민주의자들은 효과가 입증된 정착자 식민주의의 몇몇 수단들을 차용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려 했다.



정착자 식민 지배의 잔혹한 역사

이스라엘을 분석할 때 정착자 식민지라는 용어가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그 용어의 의미와 팔레스타인 독립 전략에 함의하는 바를 **찰리 김**씨가 살펴본다.

만드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스라엘과 꼭 마찬가지로, 과거의 정착자 식민주의자들은 풍요로운 토착 문화를 쓸어버리면서 이를 정당화하려고 토착 원주민들이 인간 이하의 존재라거나 열등한 인간이라는 인종차별적 거짓말을 퍼뜨렸다.

인종 학살 역사가인 벤저민 매들리는 이렇게 썼다. “태즈메이니아에서 토착 원주민 아이들을 납치해 두개골에서 뇌가 쏟아져 나오도록 구타하거나, 토착 원주민들을 일렬로 세워 사냥총 연습 과녁으로 쓴 식민주의자들에게 그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였을 것이다.

“백인들은 토착 원주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끔찍할 정도로 역겹다’, ‘인류와 원숭이의 중간 단계’, ‘신체와 지능 면에서 인간 가운데 최하의 존재임이 틀림없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백인 정착자들은 유키(아메리카 토착 원주민 집단의 하나)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겼다.

“정착자 드라이덴 라콕이 유키 학살

에 일상적으로 가담했다고 으스스대고 그의 이웃 행크 라라비가 손도끼로 유키 어린이 60명을 살했다고 우쭐댄 것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859년에 “인디언 킬러”로 악명 높은 월터 자보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키 사람들을 두고 “인간으로 분류되는 생물 중에 가장 저열하고, 역겹고, 도둑질이나 일삼는 가장 한심한 무리”라고 썼다.

나미비아에서 활동한 엘거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적었다. “평범한 독일인은 원주민을 고등 유인원과 비슷한 존재로 깔보고(‘개코원숭이’라고 부르길 가장 좋아한다) 그들을 짐승처럼 대한다. 정착자들은 원주민이 백인에게 유용할 때에만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

물론, 정착자 식민 운동만이 인종차별로 정당화되는 대대적 폭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멀리 떨어진 본국에서 토착 원주민을 지배하며 (모두 학살하는 게 아니라) 착취하는 경우에도(이를 “비정착 식민주의”라고도 한다) 그런 범죄가 자행된다. 이런 형태의 식민 지배는 인도에서 특히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1876~1878년 인도 대기근으로 인도인 600만 명 이상이 아사하는 와중에도 인도에서 식량을 수출해 갔다.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그로부터 30년 전 아일랜드 빈농을 상대로도 똑같은 사악한 범죄를 자행했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저서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홀로코스트》[국역: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2008, 이후)]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1875~1900년 사이(인도 역사상 최악의 기근이 닥쳤던 시기다)에 연간 곡물 수출량은 300만 톤에서 1000만 톤으로 늘었다.” 250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다.

“20세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인도는 현지의 식량 안전을 희생하며 영국 밀 소비량의 5분의 1 가까이를 공급했다.”

인도 총독인 리턴 경은 마드라스[첸나이의 옛 지명] 일대에 사는 수많은 소농들의 고통을 덜 조치가 필요하다는 촉구를 모두 물리치고, 빅토리아 여왕의 인도 황제 즉위식 준비에 몰두했다.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고위 관리 6만 8000명이 일주일 동안 성찬을 즐



사진 출처 UNRWA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최악의 참상을 강요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안팎에서 만만찮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기면서 인도를 “행복하고 부유하고 안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여왕의 약속을 듣는 자리였다.

마드라스 주변 농촌에서 사람들이 기아와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여왕의 손님들은 세계 각지에서 값비싸게 수입한 최고급 먹거리들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

식민 정착자 국가가 언제나 토착 원주민을 철저하게 도륙하길 바라고 그들을 강도 높게 착취하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남아프리카연방(지금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그곳에서는 식민주의자들이 흑인들을 도륙할지, 노예로 삼을지, 임금 노동자로 부려서 가치를 추출할지를 놓고 자기들끼리 쟁투를 벌였다.

중국에 제국주의적 자본가들은 흑인들에게 광산 노동을 강요했다. 이는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줬으나, 흑인들이 조직을 갖추고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들고 일어나면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종말로 이어졌다.

토착 원주민은 수동적 존재이거나 그저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반격에 나선다. 그리고 정착자 식민 운동은 이 사실을 이용해 자신들의 대량 학살을 “자기 방어”라고 정당화한다.

미군 장군이었던 필립 세리튼은 그런 학살 정당화의 전문가였다. (세리튼은 “착한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뿐”이라는 역겨운 말로도 잘 알려진 자다.) 그는 1870년대에 이렇게 썼다. “어느 인디언 마을이 공격당하고 그 여성과 아이들이 살해당하면 그 책임은 병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공격을 불가피하게 만든 범죄를 저지른 인디언들에

게 있다.”

1886년에 역사가 제이컵 P 던은 인디언 여성과 아이를 죽이는 것이 “복수”이며, 미국인 식민지 확장에 맞선 인디언 전사들의 투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정당화했다.

정착자 식민 운동은 저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스라엘도 단순히 분류하기에 어려운 구석이 있다. 그러나 시온주의 식민주의자들은 효과가 입증된 정착자 식민주의의 몇몇 수단들을 차용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려 했다.

악마화

시온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정착하고 있다고 스스로와 남들을 속였다. 시온주의자들은 아랍인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자행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시온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억압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내쫓는다. 그러면서 그들을 악마화하려 한다. 그리고 10월 7일 이후에도 그랬듯이 자신들의 인종 학살 정책이 “자기 방어”라고 주장한다.

19세기에는 이런 주장들이 먹혔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보면서 거기에 자신들과 똑같은 염원이 담겨 있음을 발견한다. 인종차별적이고 지독하게 불평등한 세계 질서에 맞서 저항하려는 염원 말이다.

각국 총리나 대통령, 점잖은 야당 지도자들은 ‘자기 방어’ 운운하는 주장이나,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라는 비방에 갈채를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주장에 수긍하는 이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일란 파페는 지금 국면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향후 2년 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최악의 참상을 강요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혹한 순간에도 우리는, 와해 중인 정착자 식민지 프로젝트가 언제나 최악의 수단을 동원해서 그 프로젝트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희망 사항을 전망과 혼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치 활동가로서 하는 주장도 아닙니다. 학자로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전문적이고 냉철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금 시온주의 프로젝트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순히 와해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제국주의자

들도 중동이라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유용한 구실을 하는 ‘경비견’ 이스라엘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의 모습은 현실과 사뭇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독립의 세 기둥 — 팔레스타인인들 자신의 용맹한 저항, 더 광범한 중동 지역 노동자·빈민의 혁명적 반란, 서방과 친서방 국가들 내의 맹렬한 저항 — 은 승리할 수 있다.

정착자 식민 지배 체제는 자본주의 지배 질서의 가장 끔찍한 사례의 하나다. 이스라엘의 혁명적 타도는 모두가 본받을 선례가 될 것이다.

출처 Charlie Kimber, ‘A bloody history of settler colonialism’ (2024. 2. 23) / 번역 김중환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59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기획 연재 팔레스타인, 저항, 혁명 — 해방을 향한 투쟁 ⑤

제국주의의 경비견 이스라엘

- ① 이스라엘 건국, 팔레스타인의 재앙
- ②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시작되다
- ③ 오슬로 협정 이후 — 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 ④ 가자지구: 하마스의 부상
- ⑤ 제국주의의 경비견 이스라엘
- ⑥ 아랍 세계의 혁명과 반혁명
- ⑦ 유대인 혐오, 시온주의 반대, 좌파
- ⑧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1948년 건국 이래 이스라엘 국가는 3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다른 어떤 나라도 미국에게서 그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제국주의의 “경비견” 이스라엘과 그 주인 미국 사이의 관계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 변화들은 이스라엘 내부의 경제적·사회적 역학과 더 광범한 역내 세력 균형 변화가 결합된 결과였다.

한때 이스라엘 경제의 생명줄이었던 미국의 직접 경제 원조는 점진적으로 종료됐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협력은 최근 몇 년 새 더 강화됐다. 다른 중동 국가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오랫동안 미국 정책의 핵심 기조였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도 이렇게 밝힌다.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군사 원조는 인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질적 우위’(QME)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2008년에는 미국 정부가 어느 중동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해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이 통과됐다.

막대한 원조

1999년 이래로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는 10년 단위 양해각서들을 통해 이뤄져 왔다. 1999년 빌 클린턴 정부하에서 체결된 최초의 양해각서는 이스라엘에 267억 달러어치의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했다. 대부분(213억 달러)은 군사 원조의 형태였다.

2007년 조지 부시 정부하에서 체결된 그 다음 10년의 양해각서는 30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약속했다. 2016년에 버락 오바마 정부는 새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9~2028년에 걸쳐 38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과 네타냐후가 종종 의견 충돌을 빚어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제국주의 '경비견'과 그 주인의 관계다

이런 일련의 양해각서들은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이 수십 년간 미국의 핵심 대외 정책이었음을 뚜렷이 보여 준다. 40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군사 원조는 이스라엘 경제를 변화시켰고,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군대가 하는 구실을 더 강화했다.

이스라엘은 2020년에 세계 12위 무기 수출국이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중국보다 턱없이 적지만,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 규모는 중국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스라엘의 첨단 군수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경제를 추동했다. 1980년대에만 해도 미국의 지원에 손 벌려야만 했던 경제적 ‘무능력자’ 이스라엘은 첨단 군수 산업 덕에 오늘날 풍요로운 산업국으로 변모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 사이의 비중이 변화한 데서도 드러난다. 2007년에 직접 경제 원조는 완전히 종료됐지만, 군사 원조는 전반적으로 늘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이 장기적·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 부문에 투자한 결과, 이스라엘은 식민지 요새, 군사 연구 실험실, 정예 타격 부대를 모두 겸하는 국가가 됐다.

미국의 군수 산업과 이스라엘의 군수 산업의 밀접한 관계는 최근 몇 년 새 더 뚜렷해졌다.

2014년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은 합작

생산 협약을 체결해, 이스라엘의 로켓 방어 체계 ‘아이언돔’의 기술에 미국 제조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재래식 전력이 열세에 있는 저항 단체들의 “비대칭적 위협”을 상대하는 미국의 전쟁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돼 있다.

첨단 군수 산업의 성장은 이스라엘의 인종 분리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시온주의자들은 줄곧 자신들의 경제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배제하려고 애써 왔다.(심지어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그래 왔다.) 그럼에도 농업·건설 같은 중요한 부문에서 많은 수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반면, 첨단 기술 산업은 비교적 소수의 숙련 노동력에 의존하는 만큼 팔레스타인인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않고도 큰 수익을 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분명 타당하지만,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의 역사적 경험과는 사뭇 다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적 국가를 타도한 힘은 주로 흑인 노동계급의 행동에서 나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노동자들은 경제적 힘이 있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홀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한편, 이스라엘 경제의 변화는 이스

라엘 정치의 장기적 우경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스라엘 국가는 예나 지금이나 인종차별적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스라엘 경제는 이전 어느 때보다 미국의 군사 경제와 긴밀하게 통합돼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달랠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무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이스라엘 우익의 자신감을 높여 줬다. 점령의 경험도 이스라엘의 우익의 자신감을 높여 줬다.

장기적 우경화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압박을 키웠다.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군사 지원은 트럼프 당선 이전에도 수십 년 동안 증가해 왔지만, 트럼프는 거기에 더해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했다. 예컨대, 트럼프는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오랫동안 미뤄 왔던 미국의 약속을 실행하고, 팔레스타인인 난민을 지원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한 것은 미국 내 기독교 우익 정치 세력들과 미국·이스라엘 내 시온주의 우익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도 일부 있다.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이 성경에 예언된 바이고 이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인가?

2월 25일 월요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뉼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 하나 배제해선 안 된다.” 대(對)러시아 전쟁을 주제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 후 마크롱은 이렇게 강조했다.

프랑스가 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크롱의 이번 입장 발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째인 지금 서방 강대국들이 위험한 확전을 고려 중임을 보여 준다.

정상회담 전에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는 논의 사항을 나열한 “대외비” 문서를 인용했다.

피초는 이렇게 말했다. “이 주제들은 많은 나토·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우크라이나 전방 군인들의 평균 연령은 이제 43세에 이르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병력을 도살장에 밀어넣으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군인 3만 1000명이 사망했다고 지난주 발표했는데, 이 수치는 터무니없이 축소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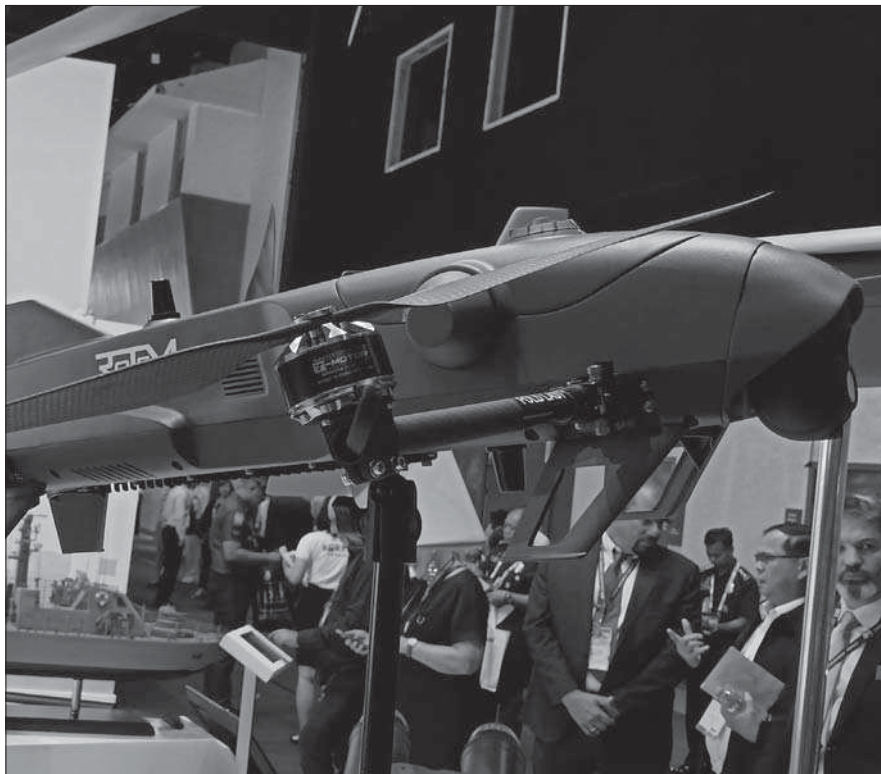
9개월 전 미국 관료들은 우크라이나 군인 7만 명이 전사하고 12만 명이 부상당했다고 추산했다.

젤렌스키는 50만 명을 추가 징집할지 여부를 두고 군부 일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병사·포탄·미사일·비행기·자금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 — 그 나름으로 분열돼 있긴 하지만 —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 대부분을 지원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나토는 서방 제국주의의 확장을 위한 전쟁을 계속 도모하는 군사 동맹이다. 우리는 서방과 나토, 그리고 러시아의 제국주의 모두에 더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출처 Socialist Worker, 'Will the West send more troops to Ukraine?' (2024. 2. 27)
번역 김준호



군수 산업은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2018년 아시아방위산업박람회에 전시된 이스라엘 무기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방대한 석유가 매장돼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중동 지역을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다

셸던 애덜슨이 그런 사례다.

애덜슨은 이스라엘 최대 일간지의 소유주이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역시 그의 후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그저 주요 후원자들과 유권자들을 만족시키려는 것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핵심적인 중동 지배 수단이다. 이스라엘은 방대한 석유가 매장돼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 지역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심화는 중동의 다른 변화들이라는 맥락 속에서도 봐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재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라엘 지지가 종교적 의무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유엔 등의 국제 기구나 다른 나라 정부가 팔레스타인 점령을 상징적인 수준에서 반대하는 것조차 막고 싶어 하는 시온주의자들의 이해관계

와 잘 부합한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지지층의 중요한 일부를 이뤘다. 한편, 트럼프 대선 선거운동의 주요 후원자 몇몇은 시온주의자들이다. 카지노 재벌인

인종분리주의의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옹호자들은 흔히 이스라엘을 민주적이고 계몽된 국가로 그린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차별로 얼룩져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기초로 세워졌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이스라엘 인권 단체 벵첼렘은 각자 대단히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내어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규정했다. 2022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1948년에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인 수십만 명을 추방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마을 수백 곳을 파괴하는 인종 청소해당하는 일을 자행한 책임이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는 거의 모든 국가 기구가 “팔레스타인

인들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강화하는 일에 연루된” 사회가 됐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한다.

이스라엘 시민권과 이스라엘로 이주할 권리에 관한 주요 법률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차별하고 유대인들에게 특혜를 부여한다. 새로 제정된 법률들은 이스라엘 인구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인계의 시민권을 국가에 대한 “불충”을 이유로 박탈할 수 있게 했다. 2018년 제정된 민족국가법은 이스라엘에서 자결권은 유대인만이 갖는다고 돼 있는데, 이는 이미 수십 년 된 현실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2002년부터는, 점령지에 사는 팔레스타인인과 결혼한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이 배우자를 이스라엘로 데려올 수 없게 됐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고용에서도 체계적 차별을 당하고, 병역 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 기회가 가로막히

일쭤다.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의 빈곤율은 유대계 이스라엘인들보다 훨씬 높다. 주택 확보와 토지 이용에 관한 차별도 극심하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유대인 행정 구역 약 600곳이 새로 생겼지만, 팔레스타인인 행정 구역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의 영아 사망률은 유대계 이스라엘인들보다 두 배로 높다.

이런 차별적인 법률 체계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인권 단체 아달라가 2011년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그 보고서에는 이스라엘의 인종차별적 법률 30개가 열거돼 있었다. 그런데 2017년 9월 아달라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는” 법률이 65개나 열거돼 있었다.

정부 지원 부족으로 엉망 된 늘봄학교 : 총선용 졸속 대책이기 때문

강동훈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됐다. 정부는 2학기부터 전체 6100여 개 초등학교의 모든 1학년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1~2학년생, 내후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 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에게 한글·수학·체육·미술·과학 등의 프로그램을 2시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저녁 8시까지 남은 아이들에게는 저녁식사도 줄 예정이다.

그동안 많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입학 후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 일반적인 한국에서 맞벌이 부부가 제3자의 도움 없이 초등학생 아이를 9시까지 등교시키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됐고, 기초수급자와 한부모 가



번지르르한 말과 달리, 정부의 빈약한 지원 때문에 늘봄학교는 시작부터 엉망이 됐다

정, 다자녀 가구, 맞벌이 등에 우선권이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방과 후 초등학생 자녀를 알아서 돌봐야 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저녁 늦게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곳을 제법 찾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돌봄 서비스를 거의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초

등학생 학부모들은 방과 후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이 학원 저 학원에 보내며 (이른바 '학원 뺑뺑이') 돌봄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때문에 많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시행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그들은 아이들이 돌봄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 학교 안에 머무는 게 안전하다고 본다.

이하로 확대하기도 했다.

상당수 학교들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도 충분히 구하지 못했다.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 운영 때도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못해 정규 교사가 대신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는데 말이다. 특히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강사 구하기가 더 어렵다.

이처럼 비정규직 인력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니 모든 초등학생에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각 학교들은 늘봄학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들은 가뜰이나 공간이 부족해 정규 수업을 위한 교실 확보도 어려웠었는데, 이제 교실을 돌봄을 위한 겸용 교실로 바꾸면서 교사들이 일하다 말고 교실을 비워 줘야 할 판이다.

이처럼 정부 지원 부족으로 늘봄학교 시행이 큰 혼란을 빚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늘봄학교 시행이 지체되면서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은 부랴부랴 조부모,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고 있다.

정부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구성하며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말뿐이다. 인력과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

▶ 15면으로 이어짐

영망진창

그러나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늘봄학교는 엉망진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늘봄학교를 저출생의 주요 해결책으로 내세우면서 새 학기 개학을 코앞에 둔 지난 2월, 늘봄학교 전면 시행 시기를 기존의 2025년에서 1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추가 인력과 시설·재정 확보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 학교는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맡을 정규 인력은 늘리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뽑아서 맡기라고 지시했다. 각 교육청과 학교는 부랴부랴 기간제 교사 모집 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못 뽑은 학교가 꽤 된다. 일부 교육청은 자격 조건을 '중등 교사 자격자'와 '만 70세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9 772005 821003 09

▶ 14면에서 이어짐

늘봄학교 자체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는 근시안적, 보수적

많은 교사들은 제대로 된 정부 지원도 없이 늘봄학교가 시행되는 것에 불만이 크다. 이미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늘봄학교 업무까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이다.

정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늘봄학교 업무를 맡기자 결국 늘봄학교 업무가 정규 교사들에게로 이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이다.

그동안의 정부 행태를 보면, 교사들의 우려가 기우인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학교 안으로 온갖 돌봄과 업무들을 집어 넣으면서도 인력 증원이나 교원 업무 경감 같은 약속은 거듭 어겨 왔다.

이 때문에 전교조나 초등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 같은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 정책을 폐기하고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에 돌봄이 남아 있으면 그 업무가 결국 교사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말이다.

지난 1월 교사노조연맹은 돌봄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했고, 초등교사노조도 1월 27일 늘봄학교 저지를 목표로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투쟁을 이끈 '전국교사일동'도 2월 17일에 늘봄학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에 4차례나 늘봄학교 규탄 집회를 연 전교조도 오랫동안 "돌봄을 학교와 분리"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늘봄학교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돌봄 확대를 원하는 노동계급 대다수의 이익에 반한다.

더욱 보수적인 것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늘봄학교 반대의 근거로 "가정양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교조는 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가정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시기는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쌓으며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간"이라며 늘봄학교가 아니라 가정양육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하게 교사노조연맹은 학교



"가정 양육"을 강조하는 교사들의 주장은 사회적 돌봄 확대를 바라는 노동계급 다수의 이익에 반한다. 2월 17일 전국교사일동 주최 집회에 걸린 배너

돌봄 확대가 "가정돌봄과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노동정책 등과도 면밀하게 연결될 수 있게 범부처적, 사회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교사일동 주최 집회에서는 심지어 늘봄학교 시행이 '아동학대'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이의 돌봄은 가능한 부모가 맡는 게 최선이고, 이를 못(안) 하는 부모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보수적 가족(가정) 가치관이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로 거리낌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수적인 관념은 아이 양육이라는 핵심적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노동계급의 개별 가정에 전가하는 지배계급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도와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개별 가정으로 떠넘겨진 부담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정 양육 강조는 여성 차별적 현실을 유지하는 데 이용된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조합원이 패되는 전교조에서조차 가정 돌봄 주장에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물론 교원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변호할지도 모른다. 자신들은 '사회적 돌봄 확대와 돌봄 공공성'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육아휴직 확대

나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대치시켜서는 안 될 것을 대치시키고 있는 것은 교원단체들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 돌봄 확대 중 전자를 우선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노동계급 가정에는 늘봄학교와 같은 사회적 돌봄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이 모두 필요하다. 둘 중 하나가 우선되거나 전제 조건이 돼야 하는 게 아니다.

조합주의

이처럼 교원단체들의 조합주의에는 비판이 깔려 있는 듯하다. 바로 정부의 부담 떠넘기기를 막을 수는 없다는 비판 말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교사를 비롯한 인력을 대폭 증원해 학교 돌봄의 질을 높이라고 요구하며 싸우지는 못하고, 정부가 떠넘기는 부담을 지자체·교육청 공무원이나 학교 비정규직 또는 학부모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계급 일부의 이익을 앞세우는 입장에 따라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교사들의 조건(가령 업무 경감)에도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늘봄학교 같은 돌봄 업무를 기존 교사가 담당하지 않게 하면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는, 전체 노동자(교사, 학교 비정규직, 자녀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노동자 등)를 단결시킬 수 있는 투쟁으로 정부에 저항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응이 훨씬 낫다.

늘어나는 돌봄 업무는 교사뿐 아니라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강사들에게도 전가되고 있다. 돌봄전담사 확충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데다, 많은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거둬들인 요구에도 돌봄전담사들을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지 않고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다. 방과후 강사들의 고용은 불안하고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이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은 늘봄학교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정부가 인력 증원과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늘봄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교육 예산을 7조 원 가까이 삭감했다. 줄어든 예산으로 돌봄 확대까지 하라니 교육 예산 삭감의 여파가 더 클 수밖에 없고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요원하다.

교사들이 학교 비정규직과 함께 연대해 늘봄학교에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싸워야만, 양질의 돌봄 확대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고, 교사의 업무 경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총리의 "극단주의 위험"
연설이 진정으로 보여 주는 것

★ 남아공 아파트헤이트 철폐
30년 — 팔레스타인에 주는 교훈

★ 제국주의와 민족 해방 투쟁

★ 제국주의, 경쟁, 폭력



이집트인 난민이 말한다 “난민에게도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한국에 온 지 6년 된 이집트인 난민이 난민의 열악한 처지, 난민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의 부당성을 <노동자 연대>에 말한다.

한국 정부가 난민법을 만든 것은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다른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공장이나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난민의 건강이나 복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이집트인 정치 난민 대다수는 2018년에 입국해서 이제 6년 차가 됐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저와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제 동료들 중에는 여전히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강보험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난민법에 따르면 명백히]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치 난민 신청자인 [상당수] 이집트인들에게는 [난민 인정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제 친구의 부인은 출산을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서 출산 비용으로 무려 15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는 친구는 80만 원만 내도 됐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간단한 시술이었는데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600만 원이나 냈습니다.

일부 예멘인과 시리아인 등 인도적체류허가 비자(G-1-6)를 받은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건강보험 없어 출산 비용이 1500만 원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도 적용해 주지 않으면서 난민 신청 심사를 지연시키기까지 합니다. [기다리다 지체] 결국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유럽 나라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유럽 나라로 가서 3개월 만에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로 한국에 입국하면 처음 6개월 동안



소중한 이웃 2022년 난민 인정 운동에 나선 이집트인 난민의 자녀들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건설이나 배달 같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들이 “불법 노동”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한국에는 적지 않은 수의 아랍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많은 아랍인이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면허를 취득했는데도 말입니다.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에는 아랍어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아서 한국어가 서툰 아랍인들은 시험을 통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운전면허 시험에 붙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 이집트 운전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집트 대사관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 난민인 제가 대사관에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새로 보는 데 드는 비용은 난민 인정을 받은 제가 아니라

이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4개월이나 걸려 운전면허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난민법에 명시돼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난민법에는 [난민 인정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제가 난민 인정자로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 “당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몇 년 있으면 국적도 취득할 수 있고 정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6년 또는 그 이상이 지나도 난민 인정을 못 받고 정치 활동 참여도 금지당합니다.

특히, 인천지역 아랍인 커뮤니티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감시와 사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아랍인들을 압박해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우익 대통령이 난민법을 개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집트인 난민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설사 난민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철회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법에 따르면 외국인인 저는 한국에서 정치 참여가 금지돼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뿐만 아니라 [탄압을 피해 망명해 온] 한국에서도 정치 참여를 금지당한 것입니다.

정치 활동 참여는 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정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의 권리를 함께 방어하고 그들과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법이 자본주의를 위한 법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저와 이집트인 난민들, 그리고 특히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면서 연대에 나서고 있는 동지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동자연대
새 웹사이트 개장
ws.or.kr

- <노동자 연대> 신문, 노동자연대 단체 웹사이트 통합
- 입체적인 첫 화면
- 기사 보기 페이지 대폭 개편
- 통합 검색 제공
- 사상과 이론 페이지 신설